

‘선제적 산불 차단’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전주시, 발대식 갖고 감시활동 강화

전주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시는 3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선제적 산불 차단! 안전한 전주를 위한 선인’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완산·덕진구청장, 시 자원순환복지국장 등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이 참석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 산불 대응팀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총 116일간 운영되며,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대책본부는 산림공원을 포함한 총 3곳에 설치되며, 하루 7명에서 최대 13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상황 관리와 초동 대응, 현장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최근 산불 발생 시기가 특정 시기가 아닌 연중 지속되는 추세를 고려해 산불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계화진화대를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 운영키로 했다.

시는 민약의 산불 발생시에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



전주시는 3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약지와 도로변, 교량 등에 소각금지 경고판과 깃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이용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된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맞물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라며 "특히 봄철은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봄꽃 식물 세밀화 전시회 개최

전주정원문화센터 정원문화도서관, 4~14일 전시

전주시는 4일부터 열흘간 전주정원문화센터 내 정원문화도서관에서 입춘을 맞아 시민들에게 봄의 생명력을 전하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세밀화 전시회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봄이 오니 크게 길하여 좋고 많은 기운으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는 입춘첩 글귀의 의미를 담아 봄을 알리는 대표 꽃인 진달래와 다양한 봄꽃 식물 세밀화 등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이와 관련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정원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정원버스킹(전주정원사 가드 닐클래스) △아름다운 정원탐방 △한국의 양치식물과 정원 활용 △우리집 정원사 △베란다 정원 가꾸기 △정원의 열두 달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시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추운 겨울이 지나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폐가전 전용 집하장 구축으로 배출 편의 ↑

전주시, 삼천동에 이전 완료 · 본격 운영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폐가전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폐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매립장에 위치한 폐가전 집하장을 삼천동 3가 889-8번지 일원(1371㎡)으로 이전 조성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폐가전 집하장은 그동안 매립장 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이유로 급증하는 폐가전 수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신고 후 수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시간 등 제한이 없는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인근 부지를 확보해 집하장을 이전하게 됐다.

새로운 집하장이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평균 30일가량 소요되던 폐가전 수거 주기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주당 약 80건에 불과했던 수거량도 300건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나 폐가전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병장고나 세탁기, TV 등의 대형가전과 5개 이상 묶음인 정수기·선풍기 등 중·소형가전은 '폐가



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용 사이트(www.15990903.or.kr)에 접속 후 '배출 예약' 메뉴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1599-0903,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 대상 품목이 확대(50개→전품목)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해 '중·소형 폐가전과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수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공동주택별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동식 폐가전 수거함과 폐배터리 수거함(500세대당 1개)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전화(063-281-8403)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수거함이 설치되면 5개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중·소형가전을 개수와 시간에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으며, 폐배터리까지 함께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전주시는 3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전주시와 전주지역 4개 대학,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체결한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협약(MOU)에 따라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주지역 4대 대학과 출입국사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주시가족센터, (사)한국외국인유학생 법률지원본부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주지역 4대 대학과 출입국사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주시가족센터, (사)한국외국인유학생 법률지원본부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주지역 4대 대학과 출입국사무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주시가족센터, (사)한국외국인유학생 법률지원본부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을 위한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권희성 기자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

인구청년정책 포럼 5일 개최

전주시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5일 오후 2시 전주시청 별관(옛 현대해상) 15층에서 '2026 전주 인구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주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청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양성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前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 '인구정책, 청년에게 답이 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교수는 인구 구

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이주영 전주시 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로 보는 전주 청년의 삶'을 통해 전주 청년 인구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오창성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제 후에는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

터 센터장과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auri 지역재생본부 본부장, 정재희 전주시의회 의원, 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 이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종광대 정비구역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3일 전주시 중노송동 일원 후백제 도성 토지(종광대) 정비구역 현장에서 사업 진행 및 보상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인 후백제 도성 종광대 현장을 방문해 보존과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상황 및 보상 절차 전 반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특히 의원들은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토지 매입과 보상 과



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 등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